

긴급진단

현대판 '수용소군도' 여자기술학원

'제도'가 짓밟은 '요보호' 여성들의 인권

포주와 정부 지원 늘리려는 기술원 등의 결탁 의혹 모든 시설 폐쇄, 지역민간단체 통해 매매춘 여성 지원해야

'시설의 장은 요보호자를 선도 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3장 13조 3항에 명시돼 있는 이 내용은 언제까지 선언으로 그칠 것인가.

채 피지도 못한 37명의 죽음과 16명의 시커멓게 탄 육신으로 돌아온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 탈출사건 역시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재단측의 군대식 운영이 낳은 결과였다. 현장의 벽면에 붙여져 있던 시간표에는 성경공부와 예배시간이 1/3이 넘었다. 하느님도 막지 못한 어린 소녀들의 탈출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들을 부추긴 것은 누구인가.

감사 태만 경기도 책임 물어야

기술원의 폐쇄적이고 독단적 운영은 이미 사고를 예견해 왔고, 이는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낳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자리잡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윤락여성인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2년 만들어진 부녀자 재활학교. 지난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자선사업재단이 위탁운영해 온 학원의 정원은 2백50명으로, 교육기간은 10개월이었으며 미용, 양재, 자수, 한복, 요리 등 직업교육과 취미교육, 예절교육과목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드러난 기술원 운영상황은 말이 보호시설이지 폭력을 묵인하

고 조장하는 인권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짝 짜여진 일정은 군대식 구타와 기함, 규율을 명분으로 한 강제로 이루어졌다. 쇠창살과 잠긴 비상구는 수용소의 그것과 흡

"경찰들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온 원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 취급을 당하더군요. 그 고압적인 수사를 보며 진정한 보호와 선도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김 씨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감사책임

가능하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구금이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개정안에서조차 '요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행위와 처벌조항이 없어 선언에 그치고 있다.

교육의 문제도 크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양재, 자수, 미용 등 교육과목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3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편. 최근에는 컴퓨터 강좌 등이 새로 첨가되긴 했지만 봉제, 미용으로 저임금 노동현장을 거친 매매춘여성에게는 설득력이 없으며, 나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더욱 맞지 않는 교육이다.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교육이라면 여성인력을 키운다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전문적이면서 원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씨는 원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폭력 경험이 있거나 결손, 구타가정에서 자라 골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식적이고 일면적인 치료보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5년 이상 공무원도 가능한 교사자격 규정을 강화해 모든 교사는 상담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바람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도 윤락여성만을 단죄하고 매매춘

을 공공연히 보장하고 있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지 않고는 언제든 재발의 가능성과 시행상의 잡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윤락여성에게도 인권이 있는가'라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않고는 윤락여성의 범주에 포함돼 버리는 기술원 원생들의 행태도 거칠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 책임 전가에 급급

"사회단체에 위탁해 운영해 오던 기술원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개원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낳아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는 서울시립여자기술원이 폐원됐잖아요. 이것은 그간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생들의 탈출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직업보도시설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폐쇄되어야 할 대상일 거예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 폐쇄하고 매매춘여성에 대한 선도는 매매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태와 이를 감사,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 씨의 이런 지적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오히려 정부의 문제인식이 얼마나 저급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직업보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불가피하게'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윤락여성의 시설입소절차 및 입소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으며, 대부분의 입소자가 정서불안 등으로 집단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자해행위, 탈출 시도 등이 빈번함에 따라 면회제한, 출입통제 등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있다'고 밝힌 불가피했던 문제점 어디에도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기술원에 대한 감사소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손준미 기자)



조사를 받기 위해 원생들이 추송되고 있다. '날지 못한 꿈' 원생들이 접은 종이학만이 지지고 있는 현장.

사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이번 사건은 기술원 잠정폐쇄와 주동자 구속으로 종료상황을 맞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본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또하나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의 고압적 수사

사고 발생 이틀 뒤 현장조사에 나선 두레방 사무장 김현선(28) 씨는 경찰이 휘두르고 있는 무형의 폭력을 보며 절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또 수용인원 1백 37명 가운데 윤락여성 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대 소녀였다는 발표와 관련해 포주와 공무원의 결탁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씨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딪힌 기술원 관계자가 전하기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기술원 입소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녀들이 술집 등에서 경찰의 '도발'에 걸려 끌려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윤락여성의 연행으로 지장을 받는 포주의 정기적인 상납과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방조,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려는 기술원 간의 묵인이

점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만이 또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선언에 그친 개정안 인권보호

윤락여성을 기술원에 수용해 온 것은 61년 제정돼 올 1월 30년만에 손질을 당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명시돼 있는 '상습적인 윤락행위자나 윤락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는 선도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그러나 이 조항은 '우려' 등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폭력남편 살해 여인 구명운동

시집에서 탄원, 인천변호사회서 무료번호 맡아

알콜중독자인 남편의 습관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결국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24일. 결혼 13년째를 맞고 있는 최모(35) 씨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 신모 씨가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버섯재배장에서 일을 마치고 조금 늦게 귀가한 최 씨에게 남편 신 씨가 늦게 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작됐다.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잠시 자리를 피하면 남편의 화가 가라앉을 것

같아 밖에 있다 8시 30분경 들어온 뒤 저녁을 준비해 남편에게 차려 주었다는 것. 그러나 남편은 '너 같은 X이 차려 준 밥은 안 먹어'라고 소리를 치고는 밥상을 엮고 재떨이를 던지는 등 12시 30분까지 최 씨를 구타했다는 것이다.

새벽 2시 경, 최 씨는 방에 들어와 자라는 말을 거부하고 마당에서 자던 남편 신 씨를 집앞 나무에 연결시킨 끈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최 씨는 이장에게 달려가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신고한 후 김포경찰

서에 유치된 뒤 인천 학익동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남편 신 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있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고, 술만 마시면 부인 최 씨를 구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재혼해 3살 때부터 친척집에서 외롭게 살아온 최 씨는 그간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식당일, 버섯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 최 씨는 이장에게 달려가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신고한 후 김포경찰

(남편에게)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겠다'고 하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최 씨의 이웃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먼저 준비를 했던 곳은 최 씨의 시집. 평소 이들의 폭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며느리 최 씨를 안타까워 하고 있던 시집에서는 최 여인의 구명을 위해 이웃들의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사건을 접한 강화여성의전화(회장 황선희)는 최 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심리적인 안정을 돕는가 하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 변호사회는 무료번호를 자청해 최 씨를 돕고 있는 상태다.

여교사 성폭행사건 원심 깨고 승소

직장내 성폭행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태인여중 김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담당판사 권남혁)가 1년4개월만에 김교사(28)의 손을 들었다.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측 문세영 교사가 '공소제목을 강간 및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요구한 공소변경을 받아들이고 "학교장으로서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여교사를 위력을 이용,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히고 피고 은용희(49) 교장에 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교사는 1심에서 피고 은교장을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형질, 직업안정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동차운수사업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형질 등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결과를 지켜본 '김교사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희)'는 "이 사건은 김교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수많은 직장여성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여성전반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